

법치주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On Relationship between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양 준 석(Junsok Yang)**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We use the rule of law index developed by the World Justice Project (WJP) which examines rule of law in eight categories for 66 countrie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x for each of the eight categories and economic growth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ur main results show that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substantial differences. For advanced countries, absence of corruption, order and securit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effective criminal justice showed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higher economic growth, while for developing countries, limited government powers, open government and effective civil justice showed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higher economic growth. While we cannot show causation, we may preliminarily conclude that fostering appropriate factors can improve economic growth.

Key words: rule of law, regulation, economic growth, corruption, transparency

I. 서론

최근 경제학에서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법과 규제체제, 법과 규제의 집행, 법치주의와 국민 법치의 수준 등 국가의 제도적 배경과 장기적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의 결정적인 비결은 시장경쟁을 도모하되 그 단점을 보완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체제이며, 여기에는 효과적인 법과 규제의 체제 및 집행과 효율적인 정부 등이 포함된다¹⁾. 구체적인 세부 요소는 각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요건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본 글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작업은 저자가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에서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이루어졌다. Visiting Scholar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John Chao교수와 학과장 Peter Morrell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법치주의 지수에 대한 각종 질문을 응답해 준 World Justice Project의 Alejandro Ponce와 Juan Carlos Botero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yangjuna@catholic.ac.kr

1) Easterly (2006), Collier (2007), Rodrik (2005) 등

는 가설이 경제성장 및 경제개발에서 정론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성장 학자들이나 경제개발 학자들은 제도적인 기초를 설립하는 것이 경제성장 및 개발의 기본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²⁾, 이러한 노력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다³⁾. 대다수 학자의 견해로는 법과 규제 체제의 설립과 법과 규제개혁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제성장이 상당히 둔해진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들은 규제개혁이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글은 효과적 제도체제의 중요한 요소인 법치주의와 단기적 경제성장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글의 구체적인 목적은 두 개다. 첫째, World Justice Project (WJP: 세계 정의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새로운 법치주의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본 글에서는 이 지수를 경제성장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법치주의를 8개의 개별적 요소로 분류하고 지수를 계산하는데, 기존 법치주의 지수들보다 객관성, 구체성과 포괄성이 훨씬 강하다. 둘째, 기존 연구는 대부분 장기적(5-10년 이상) 경제성장률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본 글에서는 단·중기적(3년) 경제성장률에 법치주의가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법치주의의 정의와 기존 법치주의 지수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설명한다. 제III장에서는 법치주의와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을 검토한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WJP의 법치주의 지수와 경제수준 및 단기적 경제성장의 관계를 탐구해 본다. 제IV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II. 법치주의 정의와 지수

1. 기존 법치주의 정의와 지수

법치주의(rule of law)의 개념은 플라톤의 저서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언급되고 있고, 오늘날 전세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없다. UN은 법치주의를 「공고되고 공평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재판되고,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합치하는 법에 대하여 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공적이나 사적 개인, 단체나 개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의 최상위적 위치, 법에 대한 책임, 법의 집행에 대한 공정성, 권력의 분리, 결정에 대한 참여권, 임의성 회피,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하고

2) Rodrik (2005)

3) 여기서 단기는 3년 이하의 기간으로 보기로 한다.

있다⁴⁾.

반면, 법치주의와 관련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수인 Political Risk Services(PRS)社の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에 포함되어 있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 지수는 법치주의의 정의를 「국민이 법의 집행과 분쟁 중재에 있어서 기존 제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도 역시 World Governance Indicator에서 법치주의를 측정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이 사용하는 정의는 「사회의 법치에 대한 신뢰도, 특히 계약집행, 재산권, 경찰과 법정의 품질과 범죄 및 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⁵⁾」이다. 여기서 소개한 정의만 보아도 벌써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에 기관이나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강조되는 요소도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각 국가나 문화권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법치주의의 집행이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소수의 문화권의 정의만을 강요한다는 비난이 흔하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적 환경, FDI 환경을 평가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 뜻은 정확하지 않고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법치주의가 경제 성장이나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널리 인정하고 있다.

PRS社 ICRG의 법과 질서(Law and Order) 지수는 1982년부터 발표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는 소프트 데이터⁶⁾ 지수이다⁷⁾. 법 부문은 법체도의 위력과 중립성을 측정하고, 질서부문은 국민이 얼마나 법을 준수하는지를 측정한다. 따라서 이는 법치주의를 협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결여된다. 또한, Davis(200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의 질(質), 법체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다.

4) "For the United Nations, the rule of law refers to a principle of governance in which all persons, institutions and entities, public and private, including the State itself, are accountable to laws that are publicly promulgated, equally enforced and independently adjudicated, and which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It requires, as well, measures to ensure adherence to the principles of supremacy of law, equality before the law, accountability to the law, fairness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separation of power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legal certainty, avoidance of arbitrariness and procedural and legal transparency." UN 보고서 (S/2004/61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5) "Rule of law capture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agents have confidence in and abide by the rules of society, and in particular the quality of contract enforcement, property rights, the police, and the courts, as well as the likelihood of crime and violence."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pdf/r1.pdf>

6) 소프트 데이터란 일반인이나 전문가의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opinion, perception)를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이며, 하드 데이터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위주로 정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7) Knack and Keefer (1995) Appendix

법치주의와 관련 널리 사용되는 또 하나의 지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이다. 이 지수는 전문가들이 국가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계산되는 소프트 데이터 지수이다. 이 지수도 역시 부정부패라는 법의 준수에 대한 일부 분야만 검토하며 객관적인 하드 데이터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지만,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icator에서 규제와 규제집행 분야는 경제차원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법이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측정한다. 이 지수는 10개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법이나 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얼마나 오랜 기간이나 인력, 비용이 드는지를 측정하는 하드 데이터 위주의 지수이다. 그러나 이 지수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영역과 무역 관련 일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

각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IMD나 WEF도 역시 법치주의를 직접 평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독립성, 규제부담, 정부정책 투명성 등 법치주의와 관련된 일부 요소들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은행 World Governance Indicator의 법치주의지수는 여러 기존 평가지수의 결과를 가중평균한 지수이다.

이러한 지수들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지수가 소수 전문가들의 단순한 평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D나 WEF의 경우, 각 전문가들이 다양한 범위의 종목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설문조사를 응답해야 함으로 법치주의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질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법치주의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 전문가의 개인이며 전반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소프트 데이터이다.

2. WJP의 법치주의 지수

WJP는 법치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치주의(rule of law)란 4개의 범세계적 공통적인 원칙을 지키는 체제로서, 이 4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와 정부관리들은 법하에 책임을 진다
2. 법은 명확하고 널리 홍보되며,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개인의 안전과 재산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3. 법의 재정(裁定)과 관리 및 집행은 이해할 수가 있고 공정하며 효율적이다.
4. 국민은 유능하며 독립적이고 윤리에 맞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하여 정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사법 관리들의 숫자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충분하고 관리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사회의 구성을 반영한다.

WJP는 법치주의 지수 자료를 2007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1차 발표한 자료(버전 1.0)는 4개 분야에 있어서 6개 국가만을 검토하였으며 지수를 계산하지 않았고, 2009년 발표한 자료(버전 2.0)에서는 16개 분야에 대하여 35개 국가를 조사하였으며 처음으로 각 분야에 대한 지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버전 3.0)에서는 버전 2.0의 16개 분야를 9개 분야로 재정리하고 35개 국가를 조사하여 지수를 발표하였다. 2011년 법치주의 지수는 버전 3.0의 9개 분야 중 2개의 분야(법의 안정성 및 투명성과 정부의 개방성)를 합쳐서 8개 분야로 재정비하고 조사대상 국가의 숫자를 6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WJP는 비공식적 정의(正義, informal justice, 즉 전통적, 민속적, 종교적 재판기관이나 사회공중적 정의)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지수로 환산해야 할지는 아직 연구 중에 있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수계산은 유보하고 있다. <표 1>에는 2011년 WJP 법치주의 지수의 8개의 분야와 각 분야 내의 소분야를 정리하였다. 지수의 값은 0에서 1사이이며 높을수록 좋다. 한국의 점수와 66개국 중 한국의 등수도 <표 1>에 정리하였다. 보다시피 한국은 등수 차원에서 중상위권에 있으며 정부의 개방도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정부권한의 제한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표 1> WJP 법치주의 8개분야

	기호	내용	한국 점수	한국 등수
정 부 의 책 임 성	F1	정부권한의 제한	0.6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이 정부의 권한을 정의한다. - 입법부와 사법부, 비정부 기관이 정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 독립적인 감사와 검토를 통하여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징벌한다 - 법에 따라 정권이 교체된다 		
	F2	부정부패 부재	0.7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 경찰과 군인, 입법부 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보 안 과 기 본 권	F3	질서와 안전	0.8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 사회적 갈등(분쟁)이 효과적으로 제한된다. - 개인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F4	기본적 인권	0.7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한 처우와 차별의 금지, 생명권과 개인의 안전,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자기 의견이나 표현의 권리, 신앙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집회와 교제의 자유 및 기본적 노동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호	내용	한국 점수	한국 등수
정부 개방 과 규제 집행	F5	정부의 개방도	0.7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 - 법은 널리 홍보되며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다. - 청원이나 참여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민간인들이 공적 법안을 입수할 수 있고 공적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F6	효과적인 규제집행	0.6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게 적용되며 집행되고 있다. - 행정적 절차는 부적절한 지연이 없이 진행되며 적법절차를 존중한다 - 정부는 재산을 수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정의 의 접근	F7	시민 정의의 접근	0.6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 가능한 구제책을 알고 있으며 법적 자문과 법적 대리(변호사 등) 및 법정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 시민 정의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부정부패가 없고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력이나 부적절한 지연이 없다. - 시민정의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ADR) 절차를 접근할 수 있다. 		
	F8	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	0.6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신속하게 판결한다. - 교정제도는 범죄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 형사사법 제도는 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없으며 정부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형사사법제도는 피고자에게 적법절차를 적용한다. 		

<자료> WJP(2011) p.11

<표 1>에서 보듯이 WJP 법치주의 지수는 8개의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F1(정부 권한의 제한), F2(부정부패의 부재(不在)), F3(질서와 안전), F5(정부의 개방도)와 F6(효과적인 규제집행)은 경제학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분야다. 반면, F4(기본적 인권), F7(시민정의(civil justice)의 접근)과 F8(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는 경제보다는 법학이나 정치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분야들이다.

WJP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수를 계산한다. WJP는 매년 조사대상 국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통계나 사실여부를 물어보는 하드 데이터 질문도 있고 인상같은 소프트 데이터를 물어보는 소프트 데이터 질문도 있다. 전문가 대상 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한 국가당 평균으로 전문가 약 300명이 질문에 응답한다. 또한, WJP는 각 조사대상 국가에 대하여 3년에 1번씩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인 설문조사는 각 국가에서 가장 큰 3개의 도시에서 총 1000명 이상의 시민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설문조사에도 역시 구체적인 사실(하드 데이터)과 인상(소프트 데이터)을 조사한다⁸⁾⁹⁾.

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법치주의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의 IMD나

WEF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도 물어볼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게는 매년 약 260개의 질문이 주어지며 일반인 설문조사에는 약 140개의 질문이 주어진다. 따라서 8가지 법치주의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응답자의 인상(소프트 데이터)과 실제 경험 및 통계(하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수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의 질문 수는 약 400개¹⁰⁾로, 이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WJP는 지수를 계산한다. 정의(正義 justice)에 대한 정의(定義 definition)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가 있으므로 설문조사에서는 최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질문하려고 노력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은 WJP도 인정한다.

WJP는 매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 3년에 한번씩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표 1>의 각 소분야, 그리고 개별 질문에 대한 통계도 웹사이트에서 공개하였다.

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기존 법치주의 지수와 비교할 때 다음 5가지 장점을 두고 있다¹¹⁾. 첫째는 다른 법치주의 지수들보다 더욱 포괄적(comprehensive)이다. <표 1>의 8가지 분야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 기본적 인권,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규제까지 다루고 있다. 둘째는 WJP가 자체로 수집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IMD나 WEF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분야에 각 분야별 1-2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평가하고 있지만, WJP는 약 400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며, 여기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된다. 셋째는 실제 법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법이나 규제가 잘 구성되어있다고 하여도 집행단계에 문제가 있으면 법치주의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질문의 상당수는 얼마나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하는지, 법의 집행이 전문가와 일반인 관점에서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넷째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실제 경험을 강조한다. 400개의 질문 중 다수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실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하드 데이터가 지수계산에 큰 영향을 준다. 다섯째로는 각 분야별로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¹²⁾. 본 글에서는 WJP 지수의 이러한 특징을 단기적 경제성장에 대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WJP 지수에도 문제는 있다. 하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내용은 다

8) WJP 담당자에 의하면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는 하드 데이터 질문의 예로는 「지난 3년 이내에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도난을 당했는가?」 「도난을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였는가?」 「신고한 경우, 범행자를 잡았는가, 손해보상을 받았는가?」 등이 있다.

9) WJP(2011) pp.14-15

10) WJP 담당자에 의하면 전문가 조사에는 약 280개의 질문, 일반인 조사는 약 120개의 질문이 있다.

11) WJP(2011) p.15

12) 2011년 하반기내지 2012년 상반기에 WJP는 <표 1>의 각 소분야, 그리고 400개의 질문에 대한 데이터도 웹사이트를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른 연구들과 같이 전문가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단, 지수의 내용을 오직 법치주의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견해를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또한 일반인의 견해와 경험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이는 각 국가의 3대 도시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사는 자들의 견해나 경험은 현재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WJP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경제학자들이 지수의 디자인과 데이터 수집 및 해석 작업에 참여를 하지만, 창립자들의 대다수는 변호사들이므로 법치주의를 보는 관점이 경제보다는 법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III. 법치주의와 경제수준 및 성장률과의 관계

1. 기존연구

법과 규제제도, 법치주의와 경제의 관계는 고전(classical) 경제학 시대부터 강조되었다. 경제주체간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거래의 규칙을 정해주는 제도가 확립해야 한다는 점은 18세기 경제학에서부터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과 규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원천적인 수준이었다. 최근 법과 규제제도,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이유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발달, 경제성장론의 발달, 그리고 경제개발이론의 단점 보완 등을 들 수 있겠다.

신제도경제학은 국가의 문화와 제도, 특히 법치제도, 재산권제도와 투명성을 통한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경제개발이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신제도경제학의 선구자인 Douglass C. North는 「제도(institution)란 사회에서 게임의 규칙이다. 더욱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인간들간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인간들이 구축한 제한이다.¹³⁾」으로 제도에는 규율(법 등) 같은 공식적 제한과 관례 및 행동규칙 같은 비공식적인 제한도 포함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신경제제도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문화가 제도적 요소(정부의 형태, 사법제도, 관료제도) 등에 영향을 주고, 이는 거버넌스 활동(계약체결, 거래방법)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이러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비롯한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거버넌스의 약점이 위기의 큰 이유 중 하나이었다는 논리가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한층 강화되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 모델¹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환경 및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솔로우의

13)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3

14) Solow (1956), Solow (2000)

성장모델에 따르면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더욱 높은 수렴현상(convergence effect)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1950-70년대 중 개도국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Helpman(2004)은 경제성장론 이론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과거에는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강조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환경, 법치주의 등 사회문화적 제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최근 경제성장론 연구를 보면 개도국들의 성장이 가속화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바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고, 제도적 바탕을 갖춘 국가들만 한정해서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을 고려하면 수렴현상을 볼 수 있다는 조건부 수렴현상(conditional convergence)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경제개발 측면에서는 과거 이론의 단점이 나타나면서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50~60년대에는 경제개발학자들이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개발전략을 제안하여 수출을 제한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1970~80년대에는 한국 등 아시아 타이거들을 따라 수출위주(export-oriented)의 개발론을 제안하여 수출을 많이 할수록 경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강조되었지만, 대다수 개도국에서는 수입대체제도나 수출장려제도가 큰 빛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부 경제개발 학자들은 수입대체나 수출위주보다는 일단 최소한의 제도적 바탕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¹⁶⁾. DeSoto(2000)에서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확실한 재산권 제도와 재산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계약제도적 바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이는 경제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치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La Porta et al (1998)에서는 영미식의 법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금융인프라가 (유럽)대륙적 법제도를 가진 국가들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따라서 자금의 효율적 공급과 성장에 더욱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Acemoglu는 여러 논문에서 제도 및 제도의 기원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¹⁷⁾. Acemoglu 연구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국가의 법제도가 식민지 법제도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주민 위주의 법제도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법의 목적이나 준수도가 다르며 자본 및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제도의 기원, 목적과 준수도는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느린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이다¹⁸⁾. 반면 Acemoglu and Robinson (2012)에서는 경제 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을 살펴볼 때 주요 사전 조건으로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적절한 법·문화 제도, 그리고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연구 중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는 Barro (1998)와 Barro and Sala-i-Martin

15) Helpman (2004) p.140

16) Rodrik (2005)

17) Acemoglu et al. (2005) 참조

18) Acemoglu et al. (2001)

(2003)를 들 수 있다. Barro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ICRG의 법치주의 지수, Democracy House의 민주화 지수, 장기 인플레이션을 등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장기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을 3SLS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Barro의 분석은 1965-1975년간 성장률, 1975-1985년간 성장률, 그리고 1985-1995년간 성장률을 각각 72, 86, 83개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 하나는 국가의 법치주의지수가 높을수록 장기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장기적 (10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았고, 1982년부터야 법치주의 지수 데이터가 있어 1965-1975년 분석에는 1982년 법치주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1975-85년 분석에는 1982-85년 데이터만 사용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ICRG의 법치주의 지수는 WJP 법치주의 지수보다 포괄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본 글과 유사한 국내 연구로는 최진욱(2006)과 차문중(2007)을 들 수 있다. 최진욱(2006)은 매년 발간되는 IMD와 WEF의 국제경쟁력 비교조사에서 규제에 대한 분야들의 점수가 종합적 경쟁력을 측정하는 최종 총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OECD 국가들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는데, 정부규제의 수준이 그 연도의 총점수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차문중(2007)은 PRS Group ICRG의 법질서 지수를 바탕으로 법질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1991-2003년간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다는 PRS Group (2005)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 한국의 법질서 수준이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이 되었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99~1.08%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본 글의 분석방법은 Barro나 최진욱(2006)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Barro와는 달리, 비록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기의 법치주의 지수가 동기의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최진욱(2006)과는 달리 규제의 영향 등 각종 법치주의 요소들이 국가경쟁력 지수가 아니라 실제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치주의와 경제수준과의 관계

본 소절에서는 법치주의 지수와 경제수준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글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WJP가 조사한 66개의 국가들로, 국명과 법치주의 지수는 <부록I>에 정리하였다. 66개의 국가를 「선진국」과 「중진 및 개도국(아래 개도국)」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기준으로 세계은행의 선진국과 중진국의 분류기준인 12276(미)달러 이상의 1인당 GNI를 2008년 1인당 GNI에 적용하였더니 23개의 선진국과 43개의 개도국이 있었다. <표 2>는 법치주의 8개 지수의 평균값을 모든 국가, 선진국, 개도국별로 정리하였다. 8개 분야의 법치주의 지수는 <표 1>에 따라 F1~F8으로 표시하였다.

<표 2> WJP 법치주의 지수 평균

	F1	F2	F3	F4	F5	F6	F7	F8
모든 국가	0.588	0.578	0.741	0.642	0.519	0.557	0.570	0.562
선진국	0.741	0.796	0.851	0.775	0.679	0.702	0.681	0.734
개도국	0.506	0.461	0.682	0.571	0.433	0.479	0.511	0.470

<자료> WJP (2011)

WJP에서 검토한 모든 66개 국가의 분야별 법치주의 지수(F1~F8), 2010년 GDP 수준, 2008~2010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2008~2010년 실질 GDP 성장률에서 인구 성장률을 뺀 수치의 평균(1인당 GDP 성장률을 대체하는 숫자)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F1-F8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든 경우 양(+)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값도 대부분 0.7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제도를 잘 갖춘 국가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단 F1(정부권한의 제한)과 F3(질서와 안전), 그리고 F3와 F4(기본적 인권)의 관계는 다소 예외적으로 각각 0.6과 0.5의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인다.

법치주의 분야별 지수와 2010년 GDP의 관계를 보면 역시 상관관계가 양이지만 값은 대부분 0.2-0.3을 기록하고 있다. 즉, 국가의 경제의 규모와 법치주의와는 약한 양의 관계만 보인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인권과 GDP의 상관계수는 0.153에 불과하여 특히 약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구와 법치주의 지수와의 관계를 볼 때도 상관관계 계수가 모두 0.2 이하로 관계가 약하다. 0.1을 넘는 지수는 F3, F4와 F7(시민정의의 접근)만으로 법치주의는 국가의 인구와 별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오히려 F5(정부의 개방)를 제외하면 인구가 클수록 법치주의의 수준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도 역시 그다지 이상한 결과는 아니다.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2위의 국가가 중국, 4위가 인도, 9위가 브라질, 11위가 멕시코, 18위가 이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경제규모가 크다고 하여도 1인당 GNI나 제도적 수준이 경제규모를 꼭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법치주의와 1인당 GNI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3를 제외하면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아주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법치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¹⁹⁾.

본 글에서는 2008-2010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다²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9) 그러나 상관계수로만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선진국이 되면서 법치주의가 강해지는지, 법치주의가 강해지면서 선진국이 되는지는 주어진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

20) 단, 2010년 경제성장률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2008-2009년도 경제성장률의 평균이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목록과 특징은 <부록>에 있다.

WJP 법치주의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 중 일부는 2008년도 설문조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단기의 기간을 설정하는 데에 2008-2010년간 3년의 평균자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보다시피 법치주의 지수와 경제성장률은 모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법치주의를 잘 준수할수록 오히려 경제성장이 낮다는 뜻이다. F4(기본적 인권)이 특히 큰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1인당 GDP의 성장률과 법치주의간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즉, 국가적 부의 증가보다 개인적 부의 증가가 법치주의에 더욱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여, GDP성장률에서 인구성장률을 뺀 숫자와 법치주의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그 정도는 비록 GDP 성장률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상관계수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는 상당히 역설적인 결과이며, 윤리·도덕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법치주의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선진국과 개도국²¹⁾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개도국들의 성장률이 대체로 높고, 솔로우의 성장론을 보아도 외부적 충격이 없으면 1인당 자본이 높은 선진국의 성장률은 1인당 자본이 낮은 개도국의 성장률보다 낮아야 하는데²²⁾,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I는 이러한 논리와 같이 -0.49라는 비교적 높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중진국 및 개도국의 특징을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²³⁾.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관계수를 따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I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음에서 약한 양의 관계(0.218)로 바뀌었다. 즉, 선진국은 수렴현상이 완료된 국가들끼리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두 변수의 관계는 아직 음(-0.360)이므로 여기서 모인 개도국들은 아직 수렴현상을 겪고 있으며 수렴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을 따로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법치주의 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양의 관계로 바뀌거나 그 관계가 상당히 미미해졌다. F2(부정부패의 부재), F3(질서와 안전)와 F8(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이 각각 0.240, 0.483과 0.323으로 비교적 큰 양의 관계를 보였다. F4(기본적 인권)는 -0.362로 경제성장률과 비교적 큰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F4와 1인당 GNI 성장률과의 관계를 보면 0.393으로 큰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는 인구 성장률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집행을 다루고 있는 F6은 2010년 1인당 GDP, 즉 스톡개념의 GDP와는 0.581인 높은 관계를 보였지만, GDP성장률이나 1인당 GNI성장률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글에서 개도국에는 중진국도 포함된다.

22) 즉, 수렴현상이 일어난다.

23) 또한 2008년부터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국가들의 성장률, 특히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낮아져서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가 있다.

모든 국가들을 같이 비교할 때 F6(효과적 규제집행)과 1인당 GNI의 관계가 0.823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을 따로 비교하는 경우, 상관계수는 0.581과 0.397로 떨어진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질의 규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진국에서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개도국에서는 규제 집행 외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상관계수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1인당 GNI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음수(-0.360)이므로 수렴현상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F1~F8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아직도 모두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관계수의 값은 대체로 선진국보다 낮다. 이는 개도국들은 아직 법치나 인권에 대한 발전이 고르지 않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뒷받침한다. 특히 F3(질서와 안전)가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 이례적인 결과는 관계는 약하지만 F4(기본 인권)과 2010년 GDP는 서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개도국에서는 법치주의의 모든 8분야가 GDP성장률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0.2를 넘는 오직 법치주의 지수는 F1(정부권한 제한)이며 F2(부정부패의 부재), F3(질서와 안전), F4(기본적 인권)과 F6(효과적 규제집행)는 약하지만 GDP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²⁴⁾. 이는 샘플에서 아직 수렴현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소절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통하여 법치주의 지수와 GDP 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다.

3. 단기성장률과 법치주의 지수의 회귀분석

앞에서는 법치주의 지수와 GDP 및 1인당 GNI, 그리고 2008-2010년 평균 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법치주의와 GDP 성장률의 상관계수는 일반적 상식보다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DP나 GNI가 법치주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GDP와 GNI는 총수요나 총공급의 쇼크를 받을 수 있다. 총수요 쇼크는 정책적 쇼크와 기타 외생적 쇼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적 쇼크로는 정부 재정정책의 변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환율의 변화를 들 수 있고, 기타 외생적 변화로는 금융위기, 소비자나 기업의 미래 경제에 대한 신뢰도 변화²⁵⁾를 들 수 있다. 총공급 쇼크로는 총요소생산성(TFP)의 변화와 노동 및 원자재 비용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규제집행 및 법치주의는 대체로 TFP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 있

24)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일부 관찰자의 주장과 같이 아직 법치주의의 전통이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노동권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 보호하면 경제개발이 느려지고, 규제는 규제포획에 의하여 일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독점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오히려 법이나 규제를 위반해야 한다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5) 신뢰도 변화를 따르는 소비와 투자의 변화를 통하여 GDP에 영향을 준다.

어 법치주의는 총공급을 통하여 GDP에 영향을 준다고 간주하지만, 투자나 소비를 원활하게 하여 총수요를 통하여 GDP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총공급을 통한 GDP 충격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총수요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는 시카고 거시경제학과나 규제를 풀고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파 정치인들은 법치주의 및 규제부담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반면, 케인즈파 경제학으로 바탕으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과 팽창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규제완화와 법치주의 강화가 대체로 중장기적으로만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전자가 옳다면 법치주의가 잘 준수되고 있으며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기적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단기적 경제성장률도 높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세금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GDP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소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회귀분석 공식은 (1)이다.

$$g_j = C + DI_j + DG_j + DT_j + F(n)_j + \epsilon \quad (1)$$

g : 2008-2010년 평균 GDP 성장률

C : 상수

DI : 2005-2007년 평균실질이자율과 2008-2010년 평균실질이자율의 변화율

DG : 2005-2007년 평균정부지출비중과 2008-2010년 평균정부지출비중의 차이

DT: 2005-2007년 평균세입비중과 2008-2010년 평균세입비중의 차이

F(n) : WJP 법치주의 지수 (n = 1...8)

ϵ : 오차 (에러)

j : 국가

재정정책의 영향은 DG와 DT변수를 통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정책과 세입정책으로 다시 분류되는데, 정부지출을 고려하기 위해서 DG변수를 정의하였다. DG는 2005-2007년간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의 GDP 비중의 평균에서 2008-2010년간 정부지출의 GDP 비중의 평균을 뺀 숫자로, 정부지출의 비중이 각 국가에서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보는 변수이다. 세입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DT변수를 정의하였는데, DT변수는 2005-2007년간 정부 세입(tax revenue)의 GDP 비중의 평균에서 2008-2010년간 세입의 GDP 비중의 평균을 뺀 숫자로, 정부세금의 비중이 각 국가에서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를 보는 변수이다. DI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변수로 2008-2010 실질이자율의 평균과 2005-2007년 실질이자율 평균의 변화를 변화율(%)로 계산한 변수이다.

DI, DG, DT 변수는 각각 세계은행의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정부지출 GDP 비중(Government expenditure), 세입의 GDP 비중 (tax receipts)를 기준으로 계산하

였다. 여기서 일부 국가에는 2년 이상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샘플에서 이 국가들을 제외시켰다. 3년 자료 중 오직 2년어치의 자료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2년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들이 샘플에서 제외되었으므로 DI, DT와 DG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샘플 크기는 66개 국가에서 41개 국가로 (선진국 14개, 개도국 27개)로 줄었다.

공식(1)에서 $F(n)$ 은 법치주의 지수로 $F1, F2 \dots F8$ 까지 각각 독립변수로 따로 회귀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치주의 지수를 하나의 공식에 삽입시켜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글에서는 단순한 OLS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법치주의지수와 거시경제변수가 모두 있는 41개 국가의 데이터를 회귀분석에 사용한 결과, F -stat는 유용하였지만, $F1$ - $F8$ 의 t -stat는 모두 미미하였다²⁶⁾. 거시경제변수 DI, DG 즉, $F1$ - $F8$ 을 하나씩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법치주의 지수는 없었다²⁷⁾. 수렴현상 때문에 법치주의와 무관하게 성장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8년 1인당 GNI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도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선진국과 개도국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앞에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았다. 따라서 데이터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고 분석을 다시 시도하였다. <표 3>은 선진국의 OLS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는데, $F3$ (질서와 안전)가 99%의 신뢰도로, $F2$ (부정부패 부재)와 $F6$ (규제집행)가 95%의 신뢰도로, 그리고 $F8$ (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이 90%의 신뢰도로 유효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F1$ (정부권한의 제한), $F4$ (기본권 인정), $F5$ (정부의 개방도)와 $F7$ (시민 정의의 접근)은 성장률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효성이 있다고 나타나는 $F2$, $F6$ 과 $F7$ 은 전통적 경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들인 반면, $F1$, $F4$, $F7$ 은 주로 정치와 관련되는 분야²⁸⁾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크게 이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²⁹⁾. 모든 법치주의 지수를 포함시킨 공식 (9)를 보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강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공식(9)는 샘플크기가 14국가뿐이지만 12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공식으로 보아야 한다.

Adjusted R^2 를 보면 법치주의 지수의 t -stat 신뢰도가 높은 공식 (2), (3), (6)에서는

26) 거시경제변수 없이 오직 법치주의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도 시도했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7) $F1$ 부터 $F8$ 의 모든 법치주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 경제성장에 $F1$ 이 긍정적, $F4$ 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28) 단, $F4$ 에는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대다수의 공식에서 DI가 유효하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이자율이 내려가면 GDP가 증가한다는 기본적 거시경제학의 결과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2008-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즉, 경제위기로 GDP 성장률이 내려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Adjusted R²도 0.59-0.68 수준으로 높다. 단 F8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공식 (8)의 Adjusted R²이 다소 약하다.

<표 3> 선진국 OLS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2008-2010년 GDP 성장률의 평균)

	(1)	(2)	(3)	(4)	(5)	(6)	(7)	(8)	(9)
C	-5.534 (4.957)	-8.993* (4.171)	-21.518* (5.842)	2.859 (10.574)	-4.962 (3.647)	-8.317 (3.997)	-7.551 (7.325)	-7.949 (4.899)	-40.643 (32.248)
DI	0.013 (0.005)	0.011** (0.004)	0.010*** (0.003)	0.009 (0.007)	0.012** (0.005)	0.015** * (0.005)	0.013** (0.006)	0.011** (0.004)	0.013 (0.008)
DG	-0.049 (0.090)	-0.100 (0.078)	-0.0834 (0.061)	-0.0633 (0.118)	-0.066 (0.085)	-0.075 (0.077)	-0.043 (0.092)	-0.062 (0.083)	-0.049 (0.178)
DT	0.084 (0.083)	0.032 (0.069)	0.049 (0.054)	0.053 (0.094)	0.093 (0.079)	0.044 (0.069)	0.042 (0.084)	0.027 (0.077)	0.003 (0.141)
F1	9.696 (6.759)								-26.463 (16.196)
F2		13.735** (5.386)							6.319 (22.481)
F3			27.081*** (6.843)						46.842 (36.595)
F4				-1.796 (13.337)					27.867 (38.307)
F5					9.976 (5.502)				-6.523 (8.963)
F6						14.783** (5.927)			21.160 (12.825)
F7							13.419 (10.830)		-20.459 (58.708)
F8								12.757* (6.544)	-2.000 (14.288)
Adj. R ²	0.297	0.498	0.684	0.138	0.367	0.489	0.262	0.393	0.588
F-Stat	2.372	4.230**	8.044***	1.519	2.886*	4.112**	2.154	3.100*	2.684
obs	14	14	14	14	14	14	14	14	14

<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수렴현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2008년 GNI 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결과, F3(질서와 안전)를 제외하고 다른 법치주의 지수의 신뢰도는 모두 무효화되었지만, Adjusted R²의 수치도 거의 모두 떨어졌다³⁰⁾. 따라서 선진국에 있어서는 수렴현상으로 부터 비롯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2008년 GNI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표 7>의 결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법치주의의 8개 분야 중 4개의 분야 F2(부정부패 부재), F3(질서와 안전), F6(규제집행), F8(효과적 형사사법 제도)가 동기의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분야들을 강화하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30) F5를 사용한 공식의 Adjusted R²는 증가하였으나, F5의 유효성은 계속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단순 상관관계수 분석과 비교할 때 F2, F3와 F8은 경제성장률과 상당히 강한 관계를 이미 보이고 있었지만, F6는 그다지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지 않았었다. 즉,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수만 검토하면 놓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회귀분석은 개도국들만 살펴본다. 거시경제 데이터와 법치주의 지수가 모두 있는 27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F1(정부권한의 제한)을 제외한 모든 법치주의 지수는 동기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으로 포함된 27개의 국가들의 경제수준이 너무 상이하여 수렴효과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법치주의 지수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샘플을 중진국과 저진국으로 분류하고자 보았지만, 두 종류의 국가들로 다시 분류하는 경우 샘플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들의 상이성에 대한 문제를 다소 수정하기 위해서 개도국 27개국 중 2005-2007년 경제성장률이 다른 개도국들보다 이례적으로 낮았던 3개 국가(자메이카, 레바논, 키르기스스탄)를 샘플에서 제외시켰다³¹⁾. 이 국가들은 이례적인 경제성장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표 4>는 남은 24개 개도국의 샘플로 다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이다³²⁾.

<표 4>에서 보듯이 F1(정부권한의 제한), F5(정부 개방도)와 F7(시민정의의 접근)이 동기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와 관련된 법치주의 분야들이 유효성을 보였으므로 법치주의 강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지만, F1, F5와 F7은 주로 정치적 법치주의 분야로 아직까지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경제학 이론적인 근거가 비교적 약한 분야들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분야의 강화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 분야들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반면 Acemoglu and Robinson (2012)에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사전 조건으로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절절한 법·문화 제도, 그리고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적했는데, 여기서 나온 회귀분석의 결과는 Acemoglu and Robinson (2012)의 결과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요 또한 GNI08의 유효성이 모두 음의 관계이며 유효하게 나타났으므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직 수렴현상의 영향이 법치주의의 영향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개의 모든 법치주의 지수를 포함시킨 공식 (9)와 (19)의 결과를 보면 역시 다중공선성의 성격을 띄고 있다.

<표 4> 고성장 개도국 OLS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2008-2010년 GDP 성장률의 평균)

31) 2005-2007년 평균 GDP 성장률이 4% 이하인 개도국을 기준으로 이 3개 국가를 제외하였다.

32) GNI08(2008년도 GNI수준) 변수 없이 분석을 시도한 결과, 거시경제 변수나 F1-F8 중 유효한 변수는 없다고 나타났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C	-1.412 (1.997)	2.366 (2.031)	7.896** (2.867)	3.084 (2.764)	-0.711 (2.641)	-3.333 (3.450)	-3.275 (3.896)	2.058 (2.851)	-2.291 (5.637)
DI	0.000 (0.002)	0.000 (0.003)	-0.000 (0.003)	-0.001 (0.002)	0.001 (0.002)	0.002 (0.002)	0.001 (0.002)	0.000 (0.003)	0.002 (0.003)
DG	0.004 (0.027)	0.0015 (0.036)	-0.007 (0.035)	-0.013 (0.036)	0.055 (0.041)	0.065 (0.041)	0.041 (0.038)	-0.004 (0.034)	0.008 (0.065)
DT	0.013 (0.026)	0.009 (0.032)	0.012 (0.033)	0.019 (0.034)	0.005 (0.030)	-0.004 (0.030)	-0.015 (0.033)	0.016 (0.033)	-0.001 (0.031)
F1	13.789*** (3.837)								25.131 (10.103)
F2		8.129 (5.050)							-10.014 (8.600)
F3			-4.267 (4.659)						-1.606 (4.573)
F4				4.374 (5.043)					-9.231 (6.614)
F5					14.916** (6.289)				-6.185 (12.378)
F6						18.869 (7.311)			4.306 (12.878)
F7							19.020** (8.410)		5.935 (10.931)
F8								7.460 (6.150)	5.865 (6.315)
GNI 08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Adj. R2	0.483	0.223	0.151	0.147	0.323	0.351	0.308	0.0179	0.462
F- Stat	5.291***	2.322*	1.816	1.793	3.195**	3.493**	3.048**	2.000	2.644*
obs	24	24	24	24	24	24	24	24	24

<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4. 회귀분석 결과의 토론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법치주의 분야들은 F2(부정부패 부재), F3(질서와 안전), F6(규제집행), F8(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이며, Adjusted R2나 효과의 크기 기준으로 본다면 특히 F3가 경제성장률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8년 GNI 수준과 경제성장률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면 선진국은 수렴현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³³⁾.

반면,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F1(정부권한의 제한), F5(정부 개방도)와 F7(시민정의의 접근)이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와는

33) 또 하나의 가능성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2008-2010년간 계속된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달리 2008년 GNI 수준이 계속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법치주의 지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크게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학 이론에서 강조하듯이 효과적인 사법 제도와 규제집행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개도국에서는 정부권한의 제한이나 정부 개방도, 시민정의의 접근 등 경제적보다는 정치적인 법치주의 요소들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Acemoglu and Robinson (2012)는 경제성장에서 선행조건이 민주적 정치제도와 강한 중앙정부라고 주장하고 Rodrik (2005) 등도 역시 기본적 정치적 자유와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 글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정치적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야만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의 길을 따를 수 있다.

이 결과는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F1, F5와 F7은 법과 정치적 투명성 및 정부의 권한 제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로 부정부패를 제한하는 기본적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단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한을 제한시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줄여주어야만 경제이론에 따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IV. 결론

본 글은 World Justice Project (WJP: 세계 정의 프로젝트)가 법치주의의 8개 분야를 다루는 새로운 지수를 통하여 법치주의와 단기적 경제성장간 서로 관계를 가지는지를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에 따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유효한 관계를 보이는 법치주의 분야들은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규제집행과 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이며, 특히 질서와 안전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상관계수 차원에서는 법치주의 지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가 약하며, 회귀분석의 경우 정부권한의 제한, 정부의 개방도와 시민정의의 접근이 경제성장률과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도국 경제성장에는 정치적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의 과제는 정치적인 제도개혁보다는 질서와 안전의 유지 및 기존 규제와 법의 집행을 효율화시키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정된 시계열 자료 때문에 인과관계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선진국에서는 질서와 안전, 부정부패의 부재 및 규제집행 등의 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관련된 사항들이 경제성장과 관련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주로 2008-2010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2008-2010년은 전세계, 특히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은 시기

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비정상적일 수가 있다. 또한, WJP 법치주의 지수가 설립된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여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직 많은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의 존재가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문제를 잘 다룰 수가 없었다. 더욱 긴 기간과 많은 국가들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면 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도 역시 수년 후 더욱 완벽한 데이터베이스가 설립된 후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차문중, (2007),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137호 (2007-01), 2007.1.5
- 최진욱, (2006),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6월.
- Acemoglu, Daron and James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New York, Crown Books
- Acemoglu, D., J. A. Robinson, and S. Joh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
- Acemoglu, D., J. A. Robinson and S. Johnson, (2005)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in P. Aghion and S.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Amsterdam, Elsevier North-Holland.
- Barro, Robert, (1998)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arro, Robert and Xavier Sala-i-Martin, (2003) *Economic Growth 2nd Edi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ollier, Paul, (2007) *The Bottom Billion: Why the Poorest Countries are Failing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Kevin, (2004) What Can the Rule of Law Variable Tell Us About Rule of Law Reforms?, NYU Law and Economics Research Paper No. 04-026.
- DeSoto, Hernando, (2004)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 New York, Basic Books.
- Easterly, William, (2006)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New York, Penguin Press.
- Helpman, Elhanan, (2004) *The Mystery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3)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
- LaPorta, R., F. Lopez-de-Silanes, A. Schleifer and R. W. Visney, (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2005)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East Syracuse NY,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 Rodrik, Dani, (2005) Growth Strategies, in Phillippe Aghion and Steven N.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ume 1A* Amsterdam, North-Holland, 2005
- Solow, Robert M. (1956) A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i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No. 1, Feb. pp. 65-9

Solow, Robert M., (2000) Growth Theory: An Expo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World Justice Project (2008)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World Justice Project (2009)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World Justice Project (2010) Rule of Law Index 2010,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World Justice Project (2011) Rule of Law Index 2011,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투고일자 : 2012. 09. 27

게재일자 : 2012. 12. 16

<부록> 국가별 법치주의 지수와 거시경제자료 유무

국가	F1	F2	F3	F4	F5	F6	F7	F8	선진국	거시자료유무
알바니아	0.47	0.38	0.77	0.65	0.42	0.46	0.51	0.39	X	X
아르헨티나	0.48	0.46	0.57	0.63	0.43	0.43	0.58	0.39	X	X
호주	0.85	0.85	0.87	0.83	0.76	0.76	0.67	0.74	O	O
오스트리아	0.8	0.85	0.88	0.85	0.76	0.74	0.72	0.79	O	X
방글라데시	0.49	0.32	0.69	0.55	0.37	0.41	0.41	0.49	X	O
벨기에	0.78	0.8	0.85	0.81	0.66	0.65	0.71	0.71	O	O
볼리비아	0.41	0.27	0.64	0.54	0.47	0.44	0.47	0.34	X	X
브라질	0.63	0.67	0.62	0.68	0.51	0.56	0.59	0.48	X	O
불가리아	0.46	0.43	0.75	0.63	0.46	0.49	0.55	0.3	X	O
캄보디아	0.33	0.17	0.7	0.42	0.34	0.27	0.36	0.39	X	X
케마룬	0.37	0.25	0.66	0.48	0.31	0.44	0.42	0.37	X	X
캐나다	0.8	0.84	0.9	0.79	0.77	0.72	0.66	0.76	O	O
칠레	0.74	0.76	0.67	0.75	0.63	0.63	0.65	0.59	X	O
중국	0.53	0.6	0.82	0.4	0.55	0.51	0.52	0.61	X	X
콜롬비아	0.62	0.56	0.55	0.59	0.59	0.56	0.58	0.43	X	O
클로아티아	0.55	0.54	0.78	0.67	0.48	0.51	0.57	0.5	O	O
체코공화국	0.68	0.68	0.81	0.82	0.53	0.56	0.64	0.76	O	O
도미니카공화국	0.5	0.43	0.57	0.63	0.46	0.44	0.55	0.48	X	O
엘살바도르	0.56	0.57	0.64	0.63	0.43	0.55	0.55	0.4	X	X
에스토니아	0.81	0.85	0.84	0.83	0.72	0.76	0.73	0.75	O	O
에티오피아	0.35	0.46	0.63	0.4	0.34	0.39	0.52	0.42	X	X
프랑스	0.74	0.82	0.84	0.79	0.61	0.71	0.67	0.67	O	X
독일	0.83	0.82	0.88	0.85	0.74	0.76	0.79	0.78	O	X
가나	0.71	0.48	0.65	0.72	0.49	0.49	0.59	0.55	X	X
과테말라	0.45	0.47	0.62	0.59	0.45	0.48	0.48	0.42	X	O
홍콩	0.76	0.86	0.95	0.73	0.77	0.64	0.68	0.84	O	O
인도	0.63	0.42	0.5	0.63	0.56	0.46	0.51	0.51	X	O
인도네시아	0.66	0.46	0.73	0.65	0.52	0.54	0.54	0.6	X	O
이란	0.39	0.5	0.73	0.32	0.44	0.56	0.58	0.49	X	O
이탈리아	0.61	0.7	0.75	0.74	0.47	0.54	0.57	0.73	O	O
자메이카	0.53	0.64	0.58	0.65	0.35	0.5	0.55	0.52	X	O
일본	0.78	0.89	0.92	0.78	0.76	0.8	0.72	0.76	O	X
요르단	0.53	0.64	0.8	0.48	0.48	0.64	0.6	0.55	X	O
카자크스탄	0.39	0.46	0.8	0.55	0.44	0.52	0.59	0.49	X	X
켄야	0.37	0.27	0.59	0.52	0.29	0.38	0.44	0.48	X	O
한국	0.6	0.73	0.83	0.76	0.71	0.69	0.65	0.68	O	O
키르기스스탄	0.4	0.26	0.77	0.54	0.36	0.46	0.44	0.36	X	O
레바논	0.53	0.45	0.74	0.67	0.36	0.39	0.48	0.48	X	O
라이베리아	0.5	0.26	0.56	0.61	0.15	0.24	0.36	0.3	X	O

국가	F1	F2	F3	F4	F5	F6	F7	F8	선진국	거시자료유무
말레이시아	0.55	0.64	0.87	0.46	0.44	0.51	0.52	0.52	X	O
멕시코	0.52	0.41	0.61	0.55	0.54	0.52	0.46	0.3	X	X
모로코	0.52	0.32	0.74	0.44	0.43	0.47	0.52	0.37	X	X
네덜란드	0.82	0.87	0.84	0.87	0.79	0.78	0.78	0.81	O	O
뉴질랜드	0.92	0.94	0.87	0.87	0.83	0.81	0.78	0.84	O	X
나이지리아	0.51	0.41	0.57	0.49	0.35	0.45	0.57	0.41	X	O
노르웨이	0.93	0.9	0.93	0.91	0.74	0.86	0.81	0.86	O	O
파키스탄	0.37	0.22	0.35	0.4	0.25	0.41	0.32	0.36	X	O
페루	0.65	0.46	0.65	0.72	0.58	0.55	0.49	0.5	X	O
필리핀	0.58	0.57	0.74	0.62	0.43	0.53	0.46	0.45	X	O
폴란드	0.75	0.73	0.83	0.8	0.56	0.58	0.58	0.72	O	X
로마니아	0.52	0.59	0.83	0.73	0.46	0.5	0.56	0.57	X	O
러시아	0.42	0.49	0.75	0.55	0.41	0.45	0.54	0.64	X	O
세네갈	0.46	0.49	0.73	0.63	0.32	0.49	0.52	0.46	X	X
싱가포르	0.71	0.91	0.95	0.62	0.59	0.74	0.67	0.83	O	O
남아공화국	0.62	0.61	0.55	0.65	0.56	0.57	0.6	0.56	X	O
스페인	0.72	0.76	0.81	0.8	0.58	0.62	0.64	0.7	O	X
스웨덴	0.9	0.91	0.92	0.92	0.88	0.88	0.76	0.8	O	X
태국	0.52	0.61	0.77	0.64	0.43	0.53	0.48	0.64	X	O
터어키	0.44	0.49	0.76	0.46	0.43	0.52	0.59	0.43	X	X
우간다	0.42	0.33	0.61	0.43	0.42	0.47	0.46	0.48	X	O
우크라이나	0.34	0.32	0.79	0.57	0.38	0.3	0.4	0.42	X	O
UAE	0.61	0.82	0.9	0.53	0.58	0.74	0.68	0.84	O	X
영국	0.81	0.79	0.86	0.8	0.79	0.79	0.71	0.75	O	O
미국	0.75	0.77	0.86	0.74	0.72	0.69	0.63	0.69	O	O
베네주엘라	0.28	0.4	0.54	0.51	0.37	0.39	0.43	0.29	X	X
베트남	0.55	0.5	0.82	0.5	0.45	0.5	0.49	0.54	X	X

<출처>: F1-F8: World Justice Project (2011), 선진국 및 거시자료 유무는 World Bank 자료에 따른 저자계산

<주> 선진국: O = 2008년 1인당 GNI 12276미달러 이상, X = 2008년 1인당 GNI 12275미달러 미만
거시자료 유무: O = 2008-2010년 실질이자율이나 정부지출에 대한 자료가 있음; X = 2008-2010년 실질이자율이나 정부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음.

국문초록

법치주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양준석(가톨릭대)

본 글은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계의 법치주의를 연구하는 NGO인 World Justice Project (WJP)는 8개의 법치주의 분야에 대해서 66개 국가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치주의 지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이 8개의 지수가 경제성장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분석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은 8개의 법치주의 분야 중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효과적인 규제집행과 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가 경제성장률과 가장 큰 관계를 보여준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부권한의 제한, 정부의 개방도와 시민정의의 접근이 경제성장률과 가장 큰 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일단은 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적합한 요소를 강화하면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진다.

주제어: 법치주의, 규제집행, 경제성장, 부정부패, 투명성